투데이 칼럼

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재공론화에 즈음하여

시대 큰 과제 중 하나는 수 만 년 동안 방시능을 지니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 전한 처리다. 지금까지 알려진 최선 의 방법은 깊고도 단단한 바위 속 에 영구적으로 매장하는 것이다.

해당 중앙부처는 사용후핵연료 저 장 최종부지 선정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또다시 준비 중 에 있다.

참고로 정부는 핵심기술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 는 핵 재처리 연구의 성공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'고준위핵폐기물'을 '사용후핵연료' 라 지칭하고 있다.

핵폐기물 처리 재공론화가 정상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중간처분장 이 2035년, 최종처분장은 2053년 이 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. 그런데 한 빛원전과 고리원전의 저장수조 내 핵폐기물은 2024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. 엇박자에 해당하는 15년 내 지 30여년 동안 원전 부지 내 임시 건식저장하는 방안이 화두로 떠오 르고 있다. 이 문제로 원전 주변지 역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.

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 내 핵폐



전 민 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

기물 저장 수조를 비우지 않는다면 원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, 따라서 블랙이웃 사태가 초래된다 고 주장한다.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안전하다는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

환경단체에서는 핵폐기물의 온도 를 지속적으로 식혀주지 않으면 사 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, 부지 내 특히 원자로에 가까이 두 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한다. 또한 임시 건식 저장은 최종 처분장이 확보되지 않 을 경우 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.

원전소재지에서는 임시 건식저장 시설 구축에 반대하면서도 한편에

서는 원전 발전 중단으로 인한 지 원금 축소를 염려하고 있다. 또한 핵폐기물 보관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 별도 부과를 위해 개정 법률 안들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.

중앙부처는 최종부지 선정 재공론 화에 앞서 원전 소재지 위주의 준 비단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임 시 건식저장시설 구축 여부와 재공 론화 방향 등을 결정토록 할 계획 으로 추진 중에 있다.

그런데 문제는 준비단 구성에 있 어 피해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전북, 특히 고창을 배제하고 있다 는 것이다.

헌법에서는 환경평등권을 보장하 고 있고 「원자력안전법」에서도 관

계시설을 구축할 경우 이해당사자 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하고 있다.

사정이 이러함에도 중앙부처는 제 외한 이유에 대해 건식저장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됨으로 위험하지 않 기 때문이라고 한다.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원전은 잘 관리되고 있으 므로 안전하다는 주장과 유사하다. 그러나 우리가 나태하거나 비상식 을 상식이라고 당연시 할 때 사고 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역 사는 말해주고 있다.

고창군은 주민 안전 자치권 확보 를 위해 산업통상지원부를 여러차 례 방문하였고, 공론화 준비단 구성 에 있어 고창주민을 포함하여 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다. 이번 재공론화는 박근혜 정부시절 실시했던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 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. 준비단 구성에서부터 모순(矛盾)이 아닌 정도(正道)를 걸음으로써 부 지 선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

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

찜질방에서 물건 관리 철저

찜질방에서 물건을 훔친 범죄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.

독자제언

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 여 손목에 끼어있는 락카룸 키를 훔 쳐 시계, 지갑, 현금 등을 훔친 것이 다. 나이도 마흔이 넘었는데 무직이었 다. 조회를 해 본 결과 사기와 절도로 기소중지자였다. 이미 그의 몸에는 찜 질방 도둑질이 몸에 익숙해졌던 것이

이렇게 찜질방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자들은 피곤하여 찜질을 하고 잠 을 자고 있는 사람 옆을 지나가면서 락카룸 키를 훔쳐 물건을 훔치고 유 유히 빠져나가는 수법을 자주 사용한 다. 물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범 행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

간혹 요깃거리를 하기 위해 지갑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범 죄자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최 소한의 돈만을 소지하고 지갑은 놔둬 야 한다. 이용자가 많은 주말에 신나 게 놀다가 봤는데 지갑이 없다면 어 떠하겠는가?

그리고 귀중품의 경우는 반드시 카 운터에 맡겨야 하며 너무 피곤해 잠 을 청할 때, 불안할 때에도 락카룸 키 를 카운터에 맡겨야 한다. 요즘 찜질 방에는 카운터 안에 보관함이 따로 있어서 귀중품을 관리해주므로 찜질 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숙지해야 한 다. 본인 물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도난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명 심하자

이진제 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

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

아일랜드 낙태 허용 국민투표



아일랜드가 25일(현지시간)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벌 인 결과 출구조사에서 찬성표가 69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날 아일랜드 노크의 한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투표를 한 뒤 한 아이와 함께 투표소를 떠나고 있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사 설

청년층 붙잡아둘 일자리 대책 절실

청년층을 붙잡아둘 대책이 절실 하다. 도내 젊은이들 상당수가 전 북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게 또다 시 확인되었다. 기회가 주어진다 면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토로 하고 있는 것이다. 그도 그럴 것 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은 친구 들을 도내의 젊은이들은 부러워 하고 있다.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. 신 규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간헐적 으로 말하지 말고 일자리 늘리기 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되겠다.

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이라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구태의 연한 대책으로는 그 약발을 기대 할 수 없다. 미취업률 전국 1위라 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다. 전북도는 이 부끄 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 할 것인가. 전북도가 전국 최하위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 는지 궁금하다. 전북도는 청년고 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 정말이지 이래서 는 곤란하다.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주어야겠다. 현재 청년 고용 열기가 식어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.

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 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. 공공기 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 참해야 하다.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 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 음을 직시해야겠다. 정규 일자리 가 기대치보다 못한데다 비정규 일자리마저 신통치 않은 현실이 답답하다.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게 아니다. 그러므로 전북도는 일 자리 약속을 실천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. 일자리 창출과 정 주 여건 개선을 위해 거액을 투자 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실행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.

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 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 아야겠다. 알바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고달파하는 젊은 이들을 생각해야 한다. 그들은 결 혼이나 인생 설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. 전북도와 각 시군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침은 실현 의지가 관건이다.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 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. 전북도 와 각 시군 지자체는 괜찮은 일자 리 창출에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.

농업 경쟁력 더 강화해야

전북도에게 할 말이 있다.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겠다. 전북 도가 삼락농정의 효과를 말했지 만 아직은 만족을 말할 수 없다. 농가 소득이 올랐다지만 농민들 의 경기 체감은 예전 그대로이다.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 삼락농 정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. 어쩌다 농촌 환경이 좋 아졌다고 보도할 때도 있지만 일 부 지역만 그렇지 모든 농촌에 해 당되는 풍경은 아니다. 도내 농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음이 그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. 농촌 인 구가 현상 유지리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전히 희망 사항 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.

전북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. 농업의 전망이 밝 다고 외쳐봤자 경쟁력이 없거나 약하다면 말짱 도루묵이다. 그러 나 경쟁력이 지금과 같지 않고 훨 씬 더 강화 된다면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. 귀농하는 젊은이 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면 분명 히 희망의 불씨가 있다.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.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손봐 둘 것 이 있다. 농업인에게만 이익이 돌 아가도록 일처리가 완벽해야겠다.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가 혜택을

보지 않고 다른 이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. 전북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농업 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요 구되다.

전북도는 삼락농정에 힘을 기울 였으므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뛰어야겠다. 전북 지역 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였으므 로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.한국 농업의 선두 주자의 자리를 확실 히 해두지는 당부이다. 청와대에 납품했던 군산의 철새도래지 쌀 을 비롯해서 정읍의 단풍미인쌀 등 우리 고장 쌀의 품질이 우수함 이 지난 십 수 년 간 입증됐던 걸 생각해야 한다. 그런데 소비 시장 에서 홀대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는 것이다. 그래서 여기 또 지적 하는 바이지만 도내 쌀 브랜드의 난립 문제를 짚어봐야겠다. 브랜 드 간소화로 이미지를 제고하자 는 당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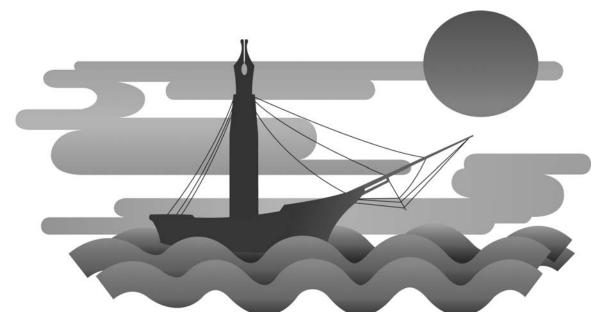
전북도는 농업 경쟁력을 더 강 화해야 한다. 다른 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농업을 등한히 해 서는 안된다. 도내 농민들은 제대 로 된 쌀값을 못 받아 속이 끓고 있다. 전북도가 농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 더 힘써야 하는 이유이

전주매일

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.

(우)560-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-80 승주빌딩 4층

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

"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"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

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
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

전주매일 인간중심 · 도덕중심 · 지역중심